

<div>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회 2024.7.11(목)</div>	<div> <div>보도자료</div> <div> <div>담당: 정책위원회</div> <div>연락처: (02)6788-2606</div> </div> </div>
--	--

오직 국민! 오직 민생! 행동하는 민주당 제22대 국회 민생·개혁 당론법안 등 총 7건 채택

더불어민주당은 오늘(7월 11일) 오후 1시 30분, 국회 본청 제4회의장에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전세사기피해자구제법, 민법 등 총 7건의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였다.

오늘 정책의원총회에 부의된 당론법안은 당선인 워크숍에서 발표했던 입법과제를 바탕으로 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위원회의에서 당론 추진을 결정한 법안들이다.

이번 당론 법안은 상임위별로 △법사위 3건(범죄피해자 보호법·감사원법·민법), △정무위 1건(가맹사업법), △환노위 1건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), △국토위 2건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·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) 이다. (국가정보원법은 정보 정책조정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제외함)

앞서 우리당은 지난 5월 30일 채택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안을 비롯하여 현재 총43건(법안 38, 결의안 및 탄핵소추안 등 5)의 안건을 당론으로 채택하였다.

민주당은 지난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당론으로 채택한 민생개혁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,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데 전념을 다할 것이다.

<첨부1> 당론 채택 법안 목록 끝.

2024. 7. 11.

더불어
민주당
정책위의장 **진성준**

첨부1 당론 채택 법안 목록

상임위	법안명(발의자)	핵심내용
법사위 (3)	• 범죄피해자 보호법 (서영교의원)	- 범죄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등을 신청한 후 구조금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구조금 지급
	• 감사원법 (박범계의원)	-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, 국회 등을 통한 외부통제 강화 및 감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 강화
	• 민법 (구하리법, 서영교의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신설 -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(미성년자에 한정)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- 피상속인, 배우자,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저지른 경우
정무위 (1)	• 가맹사업법 (민병덕의원)	- 가맹점사업자 단체등록제와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이에 응할 의무 신설
환노위 (1)	•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(김주영의원)	- ‘헌법’ 상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(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제한)
국토위 (2)	• 전세사기피해자구제법 (염태영의원)	-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선 보상 방식의 피해자 일상회복 추진,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등 책임 강화 및 피해자 중심의 종합구제대책 입법화
	• 화물자동차법 (이연희의원)	-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상시도입 및 화물차주의 권익보호와 교통안전 도모